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		배포일시	2018. 6. 27(수) / 총 11매(본문7, 붙임4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영한, 사무관 박정혁, 임상준
	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		• ☎ (044)201-3497, 4597
	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		• 과장 정채교, 서기관 정양기
	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		• ☎ (044)201-3557
	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		• 과장 고정민, 사무관 박주언
			• ☎ (044)215-5214
			• 팀장 배병관, 사무관 채원혁
			• ☎ (044)215-2851
			• 과장 이동원, 서기관 전영재
			• ☎ (044)203-4586
※ 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8페이지 참조			
보 도 일 시		2018년 6월 28일(목) 경장 종료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「 건설산업 혁신방안 」 발표

- 기술·생산구조·시장질서·일자리 혁신 추진 -

【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「4대 부문 핵심전략」 】

- ① (기술 혁신) 공공 주도 R&D, 스마트 인프라 규제특례,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화
- ② (생산구조 혁신) 건설업 업역 개편,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, 무등록 시공팀 관리·퇴출 등을 통해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화
- ③ (시장질서 혁신) 부실기업 퇴출, 원-하도급 불공정 근절,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, 적정 공사비 책정 등을 통해 부실, 불법, 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화
- ④ (일자리 혁신) 취업연계형 지원 강화, 강소기업 육성 및 '창업허브' 구축,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화

□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6월 28일 (목) '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'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'건설산업 혁신방안'을 발표하였다.

-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,
 -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*과 노동계·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**을 거쳐 마련되었다.

* 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 산업 발전전략 용역(보스턴컨설팅그룹, '17.6~12)

** 업계 10회, 노동계 4회, 노사정 협의체 6회, 전문가 토론회 4회('17.6~'18.5)

- 건설산업은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%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.
 - 그러나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, 기술 경쟁력 부족,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.

-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¹⁾, 경직적인 생산구조²⁾,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³⁾,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⁴⁾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,

1) 선진국 대비 70~80% 수준, R&D 투자비중 0.2%(전 산업 1.3%)

2) 10% 미만인 직접시공 비율,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인한 공정경쟁 부족 등

3) 일반 국민의 80.2%가 건설을 불공정 산업으로 인식(국토부 설문조사, '17)

4) 40대 이상 취업비중('17): 건설업 84% vs 전 산업 65%

- 물량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,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.

-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【 기술 혁신 】

(1)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

-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의 R&D 투자(~'27)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*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.

* BIM(Building Information Modeling, 3차원 설계·시공관리·유지보수 플랫폼), 공장형 시공, IoT 기반 유지관리 등(투자규모는 재원여건에 따라 변동가능)

-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 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며, BIM 등 핵심적 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.

[2]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

- 건설·통신·소프트웨어 산업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* 적용을 추진한다.

* 건설 + IT + SW업체 간 컨소시엄·SPC에게도 건설사업 자격을 부여하는 등 각종 법령상 규제의 적용배제(스마트인프라법 제정, '19)

- 설계·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(CM)를 제도화하고,
 - 설계·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(특수교량 등 14개 공종으로 제한→ BIM 등 첨단공법 적용시 턴키발주 허용)할 예정이다.

[3]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

-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('18.9)하고, 해외 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(月 100→300만원)한다.
- 지난 6월 8일 설립된 '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'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중 수립하고,
 -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(~'20)하여 우리 기업에게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.

【 생산구조 혁신 】

[1]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

-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*하고,

* ('18) 70억원 미만→ ('20) 100억원 미만(전문의 원도급시장 진출과 연계 추진)

-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직접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이다.

[2]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

-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·반장·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,
- ①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하고,
 - ②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·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.

[3] 건설업 업역·업종·등록기준 개편

- '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*를 개선하고, 업종·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편한다.

*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,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시공자격을 제한하여 종합·전문건설업간 공정경쟁을 저해(건설산업기본법)

- ① 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·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.
 - 다만,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 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,
 - 전면폐지, 부분폐지(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)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.
- ② 또한, 종합-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(종합 5종, 전문 29종)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재검토하고,
- ③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의 사례*를 감안,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,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.

* (일본) 5천만원, (미국 캘리포니아) 8백만원 수준 vs (한국) 10~2억원

- **업역·업종·등록기준 개편**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,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,
 - 전문기관 용역, 건설산업 혁신위원회* 등을 통한 **의견 수렴**과 공론화를 거쳐 **9월경 로드맵 발표**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.

* 국토부 1차관, 종합·전문협회·업체, 노동계, 시민단체 등 참여 중('18.4~)

【 시장질서 혁신 】

[1] 부실업체 퇴출 강화

-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**점검을 강화***한다.

* 기술인협회 DB를 통해 점검(기술자 자율신고) → 고용보험 가입정보 확인

-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(KISCON)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하여 건설업 등록중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**정밀점검도** 추진한다.
- 소액 공사(3~5억 원 미만)에 대한 **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 요건도 강화**(3개 현장당 1명→ 2개 현장당 1명 이상)하여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.

[2] 불공정 관행 근절

-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(국가계약법 개정)한다.
- 원-하도급자 간 **상생협력**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.
 - ①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, 공사물량·공기·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하여 '**깜깜이 입찰**' 관행을 개선하고,
 - ②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*을 강구한다.

* 저가하도급 판정기준 상향(예가대비 60→ 64%), 간접비 포함여부 심사, 경쟁 입찰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사유 축소('18.11)

- ③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*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.

* 신용등급 A⁰ 이상 원청은 면제→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면제 폐지

[3] 공공공사 건설시공 기반조성

-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한다.
 -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, 저가 경쟁 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,
 -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('20년 예정)과 적정 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.

【 일자리 혁신 】

- 도제훈련, 해외현장 훈련,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*도 강화한다.
 - * 청년층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(전문건설업체 고용실태 평가제 도입, '18.10)하여 시공능력평가 등 우대
-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, '청년창업 허브'를 구축하여 8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.
 - * 사무공간·신기술 시험시설 제공, 건기연 보유기술 지원, 특허 자문 등
-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, 특1급, 특2급으로 세분화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하면서,
 - 적산사(Quantity Surveyor), 공정관리사 등 신규 자격도 신설하여 공법 변화와 현장 수요에 맞는 청년 기술자의 유입을 확대한다.
- 지자체, 건설사와 '건설워크넷'(일자리 매칭시스템, 기술인협회 운영)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구인·구직 미스매칭도 해소한다.

【 향후 추진계획 】

-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,
 - 업역·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관계부처 합동의 「건설산업 혁신 방안」을 통해 건설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,
 - 9월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「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(2018~2022)」도 고시할 예정이다.

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

추진과제	담당자 및 연락처
1. 기술혁신	
1-1.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	
■ 공공 R&D 투자 강화	국토부 기술정책과 정양기 서기관(☎044-201-3557)
■ 신기술 지정비용 경감·안전관리비 지급대상 확대	국토부 기술정책과 김병진 사무관(☎044-201-3558)
■ BIM 등 핵심기술 의무적용 확대	국토부 기술정책과 김병진 사무관(☎044-201-3558)
1-2.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	
■ 스마트인프라건설 촉진법 제정	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
■ 시공책임형 CM 제도화 추진	국토부 건설정책과 이창훈 서기관(☎044-201-3507)
■ 턴키 개선방안 마련	국토부 기술기준과 김남철 사무관(☎044-201-3564)
1-3.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	
■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도입	기재부 계약제도과 박주언 사무관(☎044-215-5214)
■ 설계자 주도 턴키사업 추진	국토부 기술기준과 김남철 사무관(☎044-201-3564)
■ 해외현장 설계인력 소득 비과세 확대	국토부 기술기준과 홍성준 서기관(☎044-201-3566)
■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	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장창석 사무관(☎044-201-3517)
2. 생산구조 혁신	
2-1.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	
■ 직접시공 강화 및 산정기준 개편	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
■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조건 부여	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
■ 직접시공 실적 가산 인정	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

추진과제		담당자 및 연락처
2-2.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		
■ 공공공사 시공팀 명단 제출		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
■ 현장근로 경력자 창업 시 인센티브 부여		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
■ 무등록 고용알선 시 건설업자 처벌 신설		국토부 건설정책과 정창대 사무관(☎044-201-3514)
2-3. 건설업 업역·업종·등록기준 개편		
■ 업역·업종·등록기준 개편 로드맵 제시		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
3. 시장질서 혁신		
3-1. 부실업체 퇴출 강화		
■ 고용보험정보를 통한 기술자자격증 대여 점검		국토부 기술정책과 박종길 주무관(☎044-201-3556)
■ 착공신고 연계를 통한 부실업체 점검		국토부 녹색건축과 김 구 주무관(☎044-201-3773)
■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 허용요건 축소		국토부 건설정책과 정창대 사무관(☎044-201-3514)
3-2. 불공정 관행 근절		
■ 부당특약 심사제도 도입 추진		기재부 계약제도과 박주언 사무관(☎044-215-5214)
■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기성실적 삭감		국토부 건설정책과 심병섭 서기관(☎044-201-3512)
■ 민간공사 공동수주 시 중소기업체 지위 보호		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
■ 상생협력 강화	하도급 입찰정보 의무 공개	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
	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	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
	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범위 축소	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전영재 서기관(☎044-203-4586)
	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	국토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044-201-3497)
■ 불공정 신고포상금제·준법등급 공개제도 도입		국토부 건설정책과 정창대 사무관(☎044-201-3514)

추진과제	담당자 및 연락처
3-3.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 조성	
■ 변별력 강화, 저가경쟁 완화 등 발주제도 개선	기재부 계약제도와 박주언 사무관(☎044-215-5214)
■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 마련	기재부 계약제도와 박주언 사무관(☎044-215-5214)
4. 일자리 혁신	
4-1. 청년층 취업 지원	
■ 도제교육 훈련비, 인건비 보조	국토부 건설산업과 백정호 사무관(☎044-201-3541)
■ 고용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	국토부 건설정책과 임상준 사무관(☎044-201-4597)
■ 현장대리인 배치요건에 근속기간 등 반영	국토부 건설정책과 정창대 사무관(☎044-201-3514)
■ 해외건설 QJT 지원 확대 및 인턴쉽 프로그램 도입	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김보민 사무관(☎044-201-3519)
4-2.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	
■ 혁신성장 바우처 추진	국토부 건설정책과 임상준 사무관(☎044-201-4597)
■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체계 구축	국토부 기술정책과 이경호 사무관(☎044-201-3550)
■ ‘청년 창업허브’ 구축	국토부 기술정책과 정양기 서기관(☎044-201-3557)
4-3.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	
■ 기술자 역량강화 방안 마련	국토부 기술정책과 박종길 주무관(☎044-201-3556)
■ 우수 건축사 배출 확대방안 마련	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홍성호 서기관(☎044-201-3776)



기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박정혁 사무관(☎ 044-201-349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4대 혁신

01 기술 혁신

“글로벌 산업”

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

- 공공 R&D 강화
R&D 1조원 추진
- 민간 기술개발 촉진
신기술제도 활성화
- 기술활용 장려
공공공사 핵심기술 의무적용 추진

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

[스마트인프라 건설 촉진법]

- 규제샌드박스: 기획, 설계, 규제특례, 관리, 시공
- 설계-시공 융복합 발주: 시공책임형 CM 제도화 (시공사의 설계 참여), 턴키 제도 개선

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

- 단순도급 위주 해외수주
- 설계·Eng 역량 강화
- KIND 설립, PPP 사업 지원
- 홍보, 네트워크 강화
- 고부가가치 수출산업

02 생산구조 혁신

“고효율 산업”

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

- 직접시공 의무제 강화
 - 대상공사: 50억원 → 70억원 → 100억원
 - 비율산정: 노무비 기준으로 개편
- 대형사 직접시공 유도
 - 주요 시설물 직접시공 지시 근거 마련
- 직접시공 인센티브 부여
 - 직접시공한 실적은 가산 인정

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

- 발주자: 원도급, 하도급
- 근로자 소개
- 퇴출 및 제도적 관리
- 현장소장: 채용팀장, 소팀장
- 불법 수주료: 불법 노무도급, 불법 수수료
- 근로자

업역·업종·등록기준 개편

- 업역: 종합, 전문, 칸막이식 규제 개선
- 업종: 복합공사 원도급, 단종공사 하도급
- 업종: 업역 다름 및 업종간 분쟁 빈번
- 등록기준: 자본금: 높은 요건, 하향 조정; 기술자: 수 중심 규제, 경력요건 추가

03 시장질서 혁신

“공정 산업”

부실업체 퇴출 강화

-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
 - 기술자 자격증 대여 → 고용보험 기반 점검
- 건설업 등록증 대여 → 착공신고 연계
- 현장배치 기술자 기준 강화

불법·불공정 관행 근절

- 대기업 불공정 방지: 부당내부거래 실적 삭감, 중소기업 계약지위보호
- 원하도급자 상생협력: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,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, 상호협력평가 내실화
- 내부고발 및 정보공개: 불공정 신고 포상금제 도입, 건설업체 준법등급 공개

공공공사 건설시공 기반 조성

- 공공 발주제도 개편
 -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 강화
 - 기술변별력 강화
- 적정공사비 책정
 - 적정임금제, 적정공기 도입 등 연계
 - 업체 부담 경감방안도 검토

04 일자리 혁신

“젊은 산업”

청년층 취업 지원

- 취업연계형 도제교육
- 고용우수업체 지원
- 정규직 전환 촉진
- 해외건설 취업 지원

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

- 강소기업 육성: 혁신성장 바꾸처, 해외 동반진출 지원, 유지관리 시장 확대
- 창업 촉진: 공간·판로 지원, 기술·교육 지원

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

- 기술등급 관리 강화: 특1급, 특2급, 특3급
- 신규자격 신설: 직인사, 공정관리사, 모틀러, BIM설계
- 건축사 자격시험 내실화: 우수건축사 배출 확대
- 일자리매칭 활성화: 구직자, 구인자, 건설위크넷, (기술자 일자리매칭), (기업, 자재 등)